

독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임종현*

I. 서론

독일에서는 패전 후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나치즘의 국가주의 폐해를 절감했던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국가기구와 공공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치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은 정부의 각 부처와 그 부속기관들, 의회와 정당, 정당관련재단, 지방자치단체, 교회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각 교육주체마다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보와 입장을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정당과 관련된 재단의 정치교육도 활발한 편이다. 독일은 1925년에 사민당(SPD)에 밀접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Stiftung)을 설립하였다. 이 정치재단은 소속 정당의 정당 활동을 돕는 정당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친화적인'(Parteiahe) 정치재단이다. 독일의 정치재단의 특징은 '깊은 역사와 전통, 탄탄한 재정규모, 정치교육,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꼽을 수 있으며, 정치재단은 재정상, 조직상 독립의 의무로 직접적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정책개발, 강령작업, 민주적 정당의 확장 등을 통한 조언, 독일과 파트너 국가 간의 정치인들의 교류를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 한양대

정당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독일의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근간이 되는 독일의 정치교육의 의미와 다양한 정치교육의 주체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정치교육의 한 주체인 독일의 정치재단 특히 현 여당인 기민당과 “정당친화적인”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조직, 구성, 업무 그리고 정치적 의미와 과제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의 정치교육을 살펴보고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독일의 정치교육과 정치교육 주체

1. 독일의 정치교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되었던 독일은 1990년 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내었다. 구소련의 영향력 상실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이라는 외적 상황을 구서독정부가 적절히 이용하여 구동독을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써 통일의 과업을 실현하였다.

패전 후에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제반분야에서 매우 선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은 통일 후의 경제발전, 민주주의제도의 확립, 민족통합과 유럽연합의 건인차 역할이라는 어려운 난제들을 커다란 혼란 없이 조화롭게 진행시키고 있다. 독일은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정치제도와 막강한 경제력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전 시켰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동시에 6백만명 이상의 유대인을 학살한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범국가로서 일본과는 달리 과거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웃국가들에게 사죄와 함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아끼지 않았다. 선진적인 민주주의의 확립과 성숙된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주변 국가의 신임을 얻고 정치적, 경제적인 발전을 하였던 것이다.¹⁾

독일은 유럽의 이웃국가들에 비해 통일민족국가의 전통이 매우 짧고, 민주주

의적 전통이 자리잡기 어려웠다. 짧았던 바이마르공화국시기를 제외하고는 민주주의적 전통을 가질 수 없었다. 제2차 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연합국들의 노력과 독일국민들의 의지의 소산으로 독일 국민들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났다.²⁾

독일의 정치교육은 여러 선진 민주국가들 중에서 가장 내용과 형식면에서 충실하고 체계화되어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자유분방했던 자유주의와 나치의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고취시켜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게 하는 한편 자율적 민주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새로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하였다. 통일 이후에 동독 시민들로 하여금 서독 체제에 조속히 적응하도록 하며 동 서독 시민의 상호이해를 통해 사회심리적 간격을 좁혀 국민통합을 이룩하였다.³⁾

독일은 정치교육을 통해서 독일인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변하게 되었다. 독일정치교육은 시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편, 시민들의 비판력 및 판단력을 제고시키고 이를 토대로 정치참여를 통한 사회의 민주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시민들은 정치교육에 의한 계몽을 통하여 정치, 경제 및 사회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립과 갈등은 물론 문제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사회구조 및 제도와 관련된 것 중에서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을 밝혀내고, 정치적인 조작에 항거할 수 있는 비판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정치교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정치교육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인이 정치적 영향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정치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
- 1) Benedikt Widmaier,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nach 1945 - Eine Erfolgsgeschicht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2. Jahrgang · 46-47(2012), 11.
 - 2) Siegfried Schiele, "Ein halbes Jahrhundert staatlich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7-8(2004), 3-5.
 - 3) 이규영,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2005), 164.

로 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정치교육은 그 내용면에서 많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운영과 체계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⁴⁾

2. 독일 정치교육의 주체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된 정치교육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소득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굳건하게 내린 점이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가르치고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었다. 독일의 정치교육의 효과는 특별히 통일을 전후하여 큰 힘을 발휘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통일의 기회를 맞았을 때, 독일 국민 대다수는 통일을 찬성하였다. 당시 동독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격차를 고려한다면, 독일 국민들에게는 통일을 통해 고통분담과 더불어 경제적인 손실이 뒤따른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었지만, 독일 국민들은 통일과 고통분담을 선택하였다.

독일은 정치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정치재단, 교회, 노조, 시민단체 등 각기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매우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정치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국가기구와 공공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치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 독일에 거주하고 부처와 그 부속기관들, 의회와 정당, “정당친화적인” 정치재단, 지방자치단체, 교회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각 교육주체마다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보와 입장을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⁵⁾

첫째, 독일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정치교육을 한다. 독일에서는 만 6세 이상의

4) 황병덕, “독일 정치 교육 연구,” 『유럽연구』 봄 제5호(1997), 88-95.

5) 김미경,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 -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 ” 『교육문화연구』 (2009), 제15-1호, 34.

학령아동은 초등학교(Grundschule)을 시작으로 13학년을 마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약간의 사립학교를 포함하지만, 대부분 국공립학교로서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학교시스템에 관한 관할권은 각 연방주가 갖는다. 학교에서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연방의 각주의 과제이다. 통상적으로 정치교육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5학년 또는 7학년부터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치교육의 기초를 배우게되며, 주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할당되어 있다. 독일 학교 정치교육의 교수방법은 학교 종류에 관계없이 선택될 수 있으나, 정치교육의 질은 학교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정치교육은 개념 및 주제의 선정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 대해 동일하게 실시되어야 하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질적 차이를 보일 수 있다.⁶⁾

둘째, 독일은 1952년 연방정부와 16개 연방주가 각각 연방 내무성 산하 ‘연방 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과 주 정부 산하 ‘주 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연방 내독성 산하 ‘전독연구소’(Gesamtdeutsches Institut)을 설립했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연방 내무부 산하에 있지만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의 기본 사안은 내무장관이 임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고문단이 정하며, 연방정치교육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감독할 감독위원회를 둔다. 연방정치교육원의 모든 예산은 연방예산에서 나오며 수백 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주 정치교육원은 주 예산에서 나온다. 연방정치교육원 예산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재단과 단체에 배분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예산과 내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중요한 초점이다. 물론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나 재단의 교육 내용이 중립적이라는 건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을 담은 교육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⁷⁾

연방정치교육센터는 연방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네 가지 과제 수행을 목표로 발족되었다. 네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을 국가적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파시즘의 지배를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국가사회주의적 이념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

6) 정창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엠에드, 2004), 404-405.

7)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ES-Information-Series*(2004), 6-7.

이 시급했다. 이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민정치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과업을 위해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었다. 둘째, 첫 번째 목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체제, 즉 민주주의와 진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을 단지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셋째, 연방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될 당시 이미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진영 간의 동서 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분단국가로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동독과 대치 상태에 있는 서독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슈만이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통합시키기 위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키고,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형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미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설립 당시에 관심을 모았던 유럽통합에 대한 사고를 국민들 속에 확산 시키는 것이었다.⁸⁾

주목할 점은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협약이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독일 정치교육은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진행된다. 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정해 놓고 있는 이 협약은 1976년 가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정치교육원의 한 학술대회에서 결정된 합의에 근거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정치교육에서의 교화와 주입식 교육의 금지이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자는 자신의 견해를 배우는 자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배우는 자는 수업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화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그리고 두루 인정받고 있는 교육 목표, 즉 학생의 자율성과 상치된다. 둘째, 논쟁중인 사안은 논쟁 그 자체로 소개해야 한다. 하나의 주제가 사회에서 대립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가르치는 자는 주제를 이러한 대립적 입장이 드러나게 서술하고 논의해야만 한다. 이 요구사항은 앞에서 말한 요구사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바, 그 까닭은 상이한 입장들이 드러

8) 박광기, “독일의 정치교육을 통해 본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 정립,”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 (2010), 4-5.

나지 못하고 선택가능성들이 은폐되고 대안들이 언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되면 교화 또는 주입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 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배우는 자로 하여금 사회의 정치적 상황과 배우는 자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최종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⁹⁾

이를 위해 연방정치교육원은 현실적 계도에 도움이 되는 정치과정의 요소와 기능간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며, 정치적 문제의식 및 정치적 판단력을 자발적으로 갖도록 노력하며, 정치적 문제의식 및 정치적 판단력을 자발적으로 갖도록 교육시킨다. 주정치교육원은 주마다 상이한 설립조건은 물론 주정부의 문화정책상의 자율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이념의 홍보, 시민의 정치참여 촉진, 정치교육을 위한 물적 지원, 정치교육 담당기관간의 협조체제 형성, 다양한 정치교육 자료 발간, 정치교육 담당자의 연수 등을 기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시민대학(Volkshochschule)제도는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독일의 학교 밖의 교육기관으로 정치교육 이외에 성인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까지 실시하고 있고, 독일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일반 사회인을 위한 사회시민정치교육은 이미 정규교육을 이수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들의 재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평생교육체제를 위한 기관인 시민대학에서도 중요한 강좌로 취급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대학은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은 아니며, 어학, 취미, 컴퓨터, 청소년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나, 시민대학의 강좌 중에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대학 역시 정치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민대학은 주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으며 정규학교교육 이외에 따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교육기관의 제도화는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에 입법화되었다. 시민대학

9) 볼프강 잔더, “독일 정치교육의 역사, 이론적 구상, 최근의 도전,” 전득주, 페터마싱, 허영식 『민주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엠에드, 2006), 16-17.

의 교과들은 모든 분야의 학습과정에서 통합적 요소로 발전했다. 정치적·사회적 문제와 환경경제의 테마는 외국어와 외국 문화의 소개, 건강 교육, 기술 문제, 역사와 사회교육학, 철학 등에서 주요한 교육 소재의 역할을 한다. 동독지역에서 정치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감에 따라 시민 대학은 이 분야를 크게 확대하였다. 시민 대학은 중소 단위의 행정 구역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대화와 만남의 장소로 인기가 높으며, 청소년 직업훈련과 학생 괴외학습, 성인 취미강좌 등도 제공한다.¹⁰⁾

넷째, 교회에서의 정치교육은 참여자의 교육적 욕구와 부합되어 있다. 교회 정치교육의 목적은 일반 정치교육의 목적과 동일하지만 과제의 경우 교회의 종교적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교회에서의 정치교육은 복음 및 종교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가치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3세계 발전문제, 군축문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문제, 실업문제, 마약 및 청소년문제 등의 시사문제가 주로 다뤄진다.

다섯째, 노동조합에서 실시되는 교육은 노동자 교육의 관점에서 계급특유의 교육적 요소(정치적 계몽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정치교육으로 파악될 수 있다. 노동조합 정치교육의 주 목적은 정치과정의 규정요인 및 기능구조에 대한 정보를 중개하는데 있으며, 정치적 행위능력을 개발하는 데도 있다. 또한 노동자의 해방, 사회의 민주화, 사회적 연대 등을 의미하는 정치적 과정을 교육과제로 다루고 있다. 더욱이 정치교육은 비판의식 및 연대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용하고 정치적 행위를 통하여 정치·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독일노동조합연맹(DGB)은 1974년 이래로 정치교육을 위한 주제를 설정하고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이 경우 주제는 노동조합의 정책적 차원에서 시사성이 있고 노동자의 문제의식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재가 선정된다. 독일 노동조합의 정치교육과 관련된 사례로 ‘코니히스빈터노동자센터’(AZK/Arbeitnehmerzentrum Koenigswinter)를 들 수 있는데, AZK는 기독교·사회/정치재단의 소속으로 이 재단은 기독교의 이념을 정치, 사회, 노동계에 구현한다는 목적으로

10)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9.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해 AZK는 노동자들에게 기독교적이고 사회적인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전수하는데 있다. AZK는 공공목적을 위해 건립되었고 전국적으로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청소년들도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¹¹⁾

여섯째, 독일 정당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당은 시민들의 정치활동을 고무하고 국민과 국가 간의 결합을 촉진하는 정치교육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당의 교육적 임무는 사회민주당(SPD)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기독교민주당(CDU)의 콘라드 아테나워재단, 기독교 사회민주당(CSU)의 한스 사이델 재단(HSS), 자유민주당(FDP)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S), 녹색당(die Grünen)의 하인리히-뵐-재단, 좌파당(Die Linke)의 로자-록셈부르크 재단등의 정당 산하재단에 의해 수행된다. 정치재단을 처음 설립한 목적도 정치 후속세대 양성이었다. 아테나워 재단이 1956년에 처음 출범할 당시 기민당 지도자들이 재단명을 '기독교 민주주의의 훈련사업을 위한 협회'라고 지었을 정도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1925년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에버트가 유언에 따라 처음에는 어려운 가정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이었던가 46년 정치재단으로 탈바꿈했다.¹²⁾

Ⅲ. 독일 정치재단 설립 배경 및 활동: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을 중심으로

1. 독일 정치재단 설립 배경 및 성격

독일인들은 과거 나치독재와 첫 민주공화국이었던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재단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정치재단은 공통적으로 독일헌법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유 민주

11) 심익섭,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 교육학회보』 제3호(1998), 299.

12) 중앙일보, 2010년 10월 05일.

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재단의 재정조달 및 활동영역 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조달에 있어 이들은 국가 지원을 유지 혹은 제고한다는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재단 사이에 논의 및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재단의 차이점이라면 정치 주제에 있어 관심사와 관점이 각기 다르다는 점, 정치신념 및 전통이 다르다는 것인데 특히 인사문제나 재단의 입장, 구성적 특성, 나아가 선거에 의해 결정되는 국민지지를, 정치적 입지 등에서 차이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¹³⁾.

독일 정치재단은 성격상 정당의 일부나 산하 기구는 아니지만 각 인접정당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인접정당의 존재는 정치재단 존립의 실질적 조건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정치재단의 법적 근거와 공익단체에 대한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정치재단은 인접정당으로부터 제도적으로 완벽한 독립적 구조를 갖출 의무가 있다.¹⁴⁾

정치재단들은 그들의 예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지 않으며, 그들은 이 재정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재단들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신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다. 이 재단들은 국고로 지원 받은 돈을 그들 관련 정당에 지원해서도 안되고 또 역으로 당으로 부터도 지원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의 이념을 선전하고 이들 정당과 합동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선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특정정당을 선전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는 없다. 이들이 이만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재단들이 수행하는 정치교육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는 독일 국가의 이해와도 일치되기 때문이다.¹⁵⁾

13) 신두철, “지구화시대 정당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2011), 6.

14) 이한규, “독일정치재단의 정치교육:콘라트 아데나워 재단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한국과 독일의 정당과 정당연구소:조직, 당내경성, 정치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독일 콘라트 아데나워재단 심포지엄, 서울(2011), 65-66.

15) Politischen Stiftungen in Deutschland (Konrad-Adenauer-Stiftung, Friedrich-Ebert-Stiftung, Friedrich Naumann Stiftung für die Freiheit, Heinrich-Böll-Stiftung, Hanns-Seidel-Stiftung, Rosa-Luxemburg-Stiftung), Positionspapier: Die Bildungsarbeit der Politischen Stiftungen in Deutschland, Berlin(2011).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치재단은 독일정부의 위탁을 받아 개발도상국에서 과거 나치 독일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 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치재단 정치교육사업은 대도시에 교육 시설 및 오피니언리더(교사, 공공단체의 대표자)들이 의회민주주의를 논의하고 사회적 시장경제, 유럽통합 등의 기초에 대한 시대의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중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학금수여 선발기준은 우수한 학업성적이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박사는 문프로젝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회참여정도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독일 연방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은 모두 다 저마다에 상응하는 정치 재단들이 있는데, 연방차원에서 중요한 것들이라면 다음과 같다.

-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친 SPD(사민당))
-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친 FDP(자민당))
- 한스 자이델 재단(친 CSU(기사당))
- 하인리히 뵐 재단(친 die Grünen(녹색당))
-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친 CDU(기민당))
-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친 Die Linke(좌파당))

독일 정치재단 중에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1925년에 설립되었지만 1933년 나치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1945년에 활동을 재개하였다. 1930년대 나치의 탄압을 받아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2차대전 후 1946년에 다시 부활하여 오늘에까지 '공익지향성을 갖는 민간문화기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벌여 오고 있다. 오늘날 FES는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교육,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학자들에 대한 학술지원, 그러한 가치를 향한 기반을 닦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대화의 장 마련, 세계정의를 목표로 하는 협력의 발전 추구, 그러한 가치의 기반을 연구하고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연구 및 정치적 조언 추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교량 마련 등의 수단을 통하여 사회민

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주한다고 하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¹⁶⁾

연방 대통령과 주 총리도 각종 연설에서 정치재단의 민주주의 발전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독일 정치재단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유럽의회 내에서는 의회 원내교섭단체 이외에 유럽차원의 초국가적 정치재단을 건설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¹⁷⁾

2.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운영과 활동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이사회는 전직 정치인 9인 이외에도 독일연방수상, 독일 및 유럽의회 의장, 독일연방하원 원내총무, 각 연방 주총리, 국회의원, 전국구/지역구 당 이사회 임원 등 현직 정치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독일 정치재단이 정계와 얼마나 깊은 연계를 맺고 있으며 반대로 정계에서도 정치재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다.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이사회 의장 1인, 사무총장 1인으로 구성된 임원진 이외에도 8개의 분과와 동수의 분과위원장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교육을 재단의 핵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⁸⁾

아데나워 재단은 교육시설을 이용하여 정치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교사, 학생, 대학생, 기업가, 정치인 그리고 공공단체의 대표자들과 같은 사회적 여론 형성층이 참여하여 의회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유럽 통합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배우고 함께 토론한다. 또한 장학 및 문화 사업에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박사과정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장학금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적이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와 봉사를 많이 하여야 한다. 물론 인접정당에의 가입 여부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며, 정치 교육적 의미에서 정치적 이념을 확산하는 연구지원도 하고 있다.¹⁹⁾

16) 신두철, “독일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2009), 89.

17) 같은 논문, 8.

18) 같은 논문, 7-8.

19) 이한규, “독일정치재단의 정치교육: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한국과

정치재단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밀접한 관계의 인접 정당의 여론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과학적 연구를 하며 자문하기도 한다. 규모가 큰 정치재단은 기록물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테나워 재단은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 사료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료관은 독일과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대표적인 정치교육 자료실이다.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은 두 개의 본부 건물(베를린, 본 근교의 샹트 아우구스틴)과 행사를 위한 베를린 아카데미, 숙박시설을 갖춘 두 곳의 교육연수 시설(본 근교의 아이히홀츠, 마그테부르크 근교의 벤프그레벤)을 각각 구 서독과 동독 지역에 갖추고 있다. 독일 주 수도에 한 곳 씩, 총 16개의 지방교육원을 갖추고 있으며 이탈리아 코메르 호수 근교의 유럽센터(콜리나 빌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총 66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에 힘입어 매년 20만 명이 넘는 아테나워 재단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²⁰⁾

3. 콘라드 아테나워 재단의 예산과 독립성

정치재단은 FNS를 제외하고 말한다면, 법적으로는 공법상의 재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등록협회이다. 하지만 재정수단의 조달과 관련하여 볼 때, 정치재단의 활동은 재단자본의 이자소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90% 이상)연방 예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는 '등록협회'이지만 '재단'이라는 명칭을 선택한 까닭은, 그 활동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이다.²¹⁾

독일 내 6개 정치재단은 연방정부로부터 1년에 약 3억 5천만 유로(6060억) 정도의 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 총액은 다른 정치재단과 연방정부, 의회의 합의에 의해 각 정치재단에 분배되는데 야당 측 재단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독일의 정당과 정당연구소:조직, 당내경성, 정치교육』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독일 콘라드아테나워재단 심포지엄, 서울(2011) 68.

20) 같은 논문, 26.

21) 허영식,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호(1997), 129.

분배과정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러한 재정에 대한 논의는 1년에 각 정치재단의 대표와 의회의 예산위원회 대표, 내무부 내 담당 부서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회의에서 재정과 관련된 상세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지며 재단활동의 근본적 사안들 또한 논의하게 된다. 3억 5천만 유로의 연간 지원총액 중 1억 8천만 유로는 연방개발협력부(Bundesministerium fuer entwicklung und Zusammenarbeit)에서 지원되는데 이것은 재단 예산의 절반 이상이 국제 활동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²²⁾

정치재단은 정당에 대해 법적, 재정적, 구조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도 개방성 및 정당에 대하여 독립적이며, 스스로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각 정당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로 인해 독일에서는 정당기관(Parteiinstitut) 혹은 정치재단(Parteistiftung)이라는 명칭대신 ‘정당과 밀접한 정치재단’(Parteinaher politische Stiftung)이라고 불린다.²³⁾

독일 정치재단의 재정조달을 보면 먼저, 연방 내무부의 일반지원은 정치재단의 기초시설 구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기타 정부부서의 목적구속적 프로젝트 지원, 외무부 및 연방개발협력부의 국제협력 지원, 교육학술부의 대학생 장학 프로젝트가 지원된다. 이들 세 개 부처의 지원내역을 보면 이들 지원규모는 이미 정치재단이 아닌 연방정부의 부처내에서 사전 결정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몇몇 연방주의 경우 지역 교육사무소(교육 전담기관)가 기타 정부 예산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재단은 이러한 정부지원(전 예산의 90%)이외에도 재단 자체 수입(기부금, 회비, 상속 및 양도자산, 재단자산)을 높여 재정 구조를 강화한다.²⁴⁾

정치재단의 예산운용은 매년 회계보고를 거쳐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방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또한 매년 재단의 연례보고서 및 연방정보지를 통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일반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²⁵⁾

22) 신두철, “독일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2009), 92-93.

23) 같은 논문, 7-8.

24) 같은 논문, 11-12.

25) 같은 논문, 7-8.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기민당의 특별한 관계는 크게 ‘독립성’과 ‘친밀성’이라는 두 개념으로 잘 설명된다. 이 중 독립성은 기민당과 재단의 활동영역이 구분된 데에서 온 개념이다. 정치재단의 임무는 정당과 동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숙고와 인식을 담당하는 정적인 성격을 갖는다. 정치재단의 핵심임무는 국민의 마음속의 민주주의 행동원칙을 단순히 이성적으로 깨닫는 수준을 넘어서 감성적, 문화적 차원으로 까지 끌어올리는데 있고 그리하여 미래에 그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데 있다. 물론, 이 임무수행은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 역사자료 보관 및 전시, 학술연구, 정치적 분석 및 상담, 국제협력 혹은 뛰어난 학생 지원 등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²⁶⁾

IV. 독일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독일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거시적으로 정치교육을 실행하였다 특히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정당과 그와 근접하게 서 있는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당원 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치재단은 정당과는 독립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정당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정치교육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재단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기반위에 특정정당과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라는 측면에서 정향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점이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다.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이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특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지향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다양성에 기초해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식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기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²⁷⁾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익과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을 한다. 특히 독일 정당재단은 정치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어 독일과 국외에

26) 신두철, “독일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12-13.

27) 김영태,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정당 정책연구 소의 비전과 발전전략』(2005), 118-119.

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기민당 아데나워 재단의 핵심 목표는 민주시민양성으로 학술연구, 정책분석, 역사자료 보관 및 전시,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교육 기능을 수행한다.²⁸⁾

독일의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으로서 정치이념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업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²⁹⁾

- 정치교육을 통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촉진
- 연구지원과 상담활동을 통한 정치적 행위 능력향상
- 학문, 정치, 국가, 경제영역 간의 대화와 연구
- 정당, 정치운동, 사회운동의 역사적 발전과정 연구
- 장학프로그램을 통한 젊은 우수인력의 학업·연구 활동 지원
- 각종 문화행사 및 장학·후견활동을 통한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
- 국제적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유럽통합과 국가간 이해에 기여

친화정당이 어떤 정당인가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적 토대에 어떠한 정치이념을 강조할 것인지가 다소 상이하다. 예컨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의 규약에 따르면 FES는 “독일 인민의 민주교육과 민주주의 정신에서 국제교류 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AS) 역시 “기독교 민주주의에 기초하여 배타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공적인 목적만을 추구”한다고 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NS)도 “자유주의의 기초에서 활동하며”, “공공의 목적”만을 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특정 정당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입각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동, 특히 정치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28) 서현진,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연구: 2006~2010년 정치교육 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2), 104.

29)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7.

하고 있다.³⁰⁾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은 정책능력과 소양을 갖춘 차세대 리더나 당원 또는 지지자를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육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치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태도의 함양과 준법정신의 고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이다. 민주주의사회의 발전은 그 구성원인 시민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과 정치체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시민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이상과 가치를 전파하고 교육하는 활동은 건강한 민주시민 양성과 정당정치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³¹⁾

특히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에 관한 1986년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각 재단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을 공동성명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되었다. “정치 재단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 문제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정치적 생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에 필요한 갖가지 수단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³²⁾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이 목적에서 보이는 이러한 유사성과 마찬가지로 주요 활동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모든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시민들의 정치적 인식능력을 고양시키고, 정치적 활동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치교육활동을 활동의 주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모든 재단들이 공통적으로 정치교육 활동 이외에 장학연구사업, 국제교류협력사업, 연구사업, 문화진흥사업, 정치활동을 위한 기초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또한 개방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이 정당의 정치교육활동이나 기타 사업과 다른 점이다. 즉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의 활동이나 사업이 특정 정

30) 김영태,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과 정치발전,” 111-114.

31) 이한규, “독일정치재단의 정치교육: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을 중심으로,” 18.

32)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7.

당의 당원에게 제한되거나 혹은 특정 정당에게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해서도 안된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정치교육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최근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들이 위계질서를 갖는 것은 아니며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 프로그램은 간행물 발간, 연수, 교육매체개발, 각종 대회 개최, 전시회, 교육서비스 등 다양하였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서적을 포함하여 다양한 간행물을 발간하고 보급하여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올바른 정치관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치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별히 공무원, 학교교원, 언론인, 정치교육 전문요원은 주요 목표 그룹으로 설정되어 연수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통일 이후에도 정치재단은 구 동독 정치교육이 남긴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는 일, 민주적인 갈등 및 논쟁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개개인의 일상생활 또는 생활실천과 정치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일, 정치적인 국가통일 이후 공동의 집단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일, 이와 관련하여 민족적인 연대의식을 수렴하고 확장시키는 일, 그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의 준거로서 이른 바 ‘헌법적 애국주의’를 정착시키는 일에 집중하였다.³³⁾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새로 통합된 동독지역의 주들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교육을 담당하였다.³⁴⁾

- 정치 특히 민주주의 법치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 그리고 의회민주주의에서 정치 의사의 형성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기본 지식들의 중재.
- 직업 가정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방향정립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제공

33) 허영식, “독일의 통일과 이에 비추어 본 정치교육,” 『한국청소년연구』 제16호(1994), 53. Albert Scharenberg, “Zu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7-8(2004), 7-10.

34) Eckhard Ruminiski, “Rolle der politischen Stiftungen: Beispiel der Konrad-Adenauer-Stiftung,” 『한국민주 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2012), 101-102.

-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정치활동에 동참하도록 시민에게 동기부여
특히 지방자치분야에서 기능직과 선출직에 새로 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법
과 언론 홍보 활동 훈련
- 독일 통일의 과정과 맞물려 국내외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사정들에 대해 알려
주는 행사
- SED-독재의 실제 규명
- 국내시장 정치연합 및 동유럽에 대한 관계 등에 중점을 둔 유럽통합 관련
전문가 학회와 세미나

V. 결론 및 시사점

독일의 정치재단은 정당 활동을 돕는 부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배경이나 목적, 운영과정 등에서 우리 정당의 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와는 상이하다.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독립”된 조직으로서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책연구소가 정치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연구소에 배분되는 국고 보조금의 30% 이외에도 정당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 구속적(지정형태)으로 일부 허용하여 정치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한 번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 및 사회 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즉,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교육이 뒤 따라와야 한다.³⁵⁾

또한 정치교육사업이나 연구지원 사업 등은 정책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고, 정당의 정책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우리가 국가

35) 신두철, “독일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100.

-정당 정책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고, 다소 근시안적이고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고려해볼 때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처럼 선거나 일상적 정치활동에 매몰되지 않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이 정치발전과 사회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³⁶⁾

우리나라 정당연구소의 교육활동은 미흡할 뿐 아니라 모 정당의 정치적 입지와 기본 정책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활동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당별 차이를 보면 여당 정책연구소들은 현안과 관련된 주제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한 반면 진보성향의 야당 정책연구소들은 당 정책이나 노선과 관련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당연구소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주시민 교육기관보다는 모 정당의 하부기관으로서의 활동에 더 충실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이 한국의 정당 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을 모델로 우리 정당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만은 없다. 다만 우리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의 정치교육 사업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해야한다. ³⁷⁾

둘째, 정당정책연구소만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료의 축적과 독자적인 영역 확보를 통해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교육에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당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경우 유럽 노동운동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사회 민주주의 자료관’을 두고 있다. 아테나워 재단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 자료관’은 독일과 유럽의 기독교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정치교육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자유

36) 김영태,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정당 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2005), 120-121.

37) 서현진,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연구: 2006~2010년 정치교육 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2012), 101-129.

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지방자치, 녹색당의 하인리히 뵐 재단은 환경문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정치재단의 교육 프로그램과 출판물 그리고 시설물은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다.³⁸⁾

셋째,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정당연구소와 정치재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국제교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논문 접수일 : 2013년 4월 16일
- ▶ 논문 심사일 : 2013년 4월 29일
- ▶ 논문 게재일 : 2013년 5월 10일

38) 서현진,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연구,” 105.

초록

독일 정당재단의 정치교육

임 종 현

독일에서는 패전 후 짧은 시간 안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나치즘의 국가주의 폐해를 절감했던 독일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들만의 특별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국가기구와 공공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정치교육의 대상은 학생을 비롯한 전 국민,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정치교육은 정부의 각 부처와 그 부속기관들, 의회와 정당, 정당관련재단, 지방자치단체, 교회와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각 교육주체마다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정보와 입장을 일반시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익과 독립성이 보장된 활동을 한다. 특히 독일 정당재단은 정치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어 독일과 국외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예를 들면, 기민당 아데나워 재단의 핵심 목표는 민주시민양성으로 학술연구, 정책분석, 역사자료 보관 및 전시,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치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이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해야한다. 둘째, 정당정책연구소만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주제어 : 독일의 정치교육, 정당, “정당친화적” 정치재단, 민주주의

Abstract

Political Education of German Party Foundations

Lim, Jong Hun

A democracy shall be completed by the continuous democratization with the help of its political education system. German party foundations do not perform the function of institutes of political parties helping the activities of parties, but are absolutely independent political foundations, which are “intimate to the parties”. Korean political parties call for special policy institutes, so that they may reform themselves to the “parties with policies”, and uphold stabilization of party system. On that line, they amended the Political Party Law and Political Fund Law in 2004, whereby establishing the institutes of policy of political parties as soon as possible. Korean institutes of policy lack functions of forming agenda and analysing policies, as well as scientific assessment and analysis as professional groups on policy matters. The German case in regards to political education would be very valuable as a guide for the Korean case because it shows a wealth of constructive experiences in terms of overcoming all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division of a country, establishing a firm faith towards democracy and training the democratic citizenship to better understand the political environment.

□ Key words : Political Education, Political Party, German Party Foundations, Democracy

참고문헌

- 김미경. 2009. “한국과 독일의 정치교육 비교-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제15-1호.
- 김영태. 2005. “독일의 ‘정당친화적’ 정치재단과 정치발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정당 정책연구소의 비전과 발전전략』.
- 박광기. 2010. “독일의 정치교육을 통해 본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 정립.” 『대한정치학회보』 18집 2호.
- 박병석. 2004.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ES-Information-Series*.
- 서현진. 2012. “한국 정당연구소의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연구: 2006~2010년 정치교육 활동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제21집 제1호.
- 신두철. 2009. “독일정치재단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연구.”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9권 제3호.
- _____. 2011. “지구화시대 정당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독일 콘라트 아테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21권 제3호.
- 심익섭. 1998. “독일정치교육 조직체계에 관한 연구: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3호.
- 이규영. 2005.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3호.
- 이한규. 2010. “한국정당정책연구소의 민주시민교육.” 『2010년 한국민주시민교육 공동세미나 자료집』.
- _____. 2011. “독일정치재단의 정치교육:콘라트 아테나워 재단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한국과 독일의 정당과 정당연구소:조직, 당내경성, 정치교육』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독일 콘라트아테나워재단 심포지엄. 서울.
- 정창화. 2004.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허영식 외 『한국민주시민교육론』. 서울:엠에드.
- 중앙일보. 2010년 10월 05일.
- 황병덕. 1997. “독일 정치 교육 연구.” 『유럽연구』 봄 제5호.
- 허영식. 1994. “독일의 통일과 이에 비추어 본 정치교육.” 『한국청소년연구』

제16호.

_____. 1997.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운영체계.”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2호.

Friedrich Naumann Stiftung für die Freiheit, Heinrich-Böll-Stiftung, Hanns-Seidel-Stiftung, Rosa-Luxemburg-Stiftung).2011. Positionspapier: Die Bildungsarbeit der Politischen

Politischen Stiftungen in Deutschland (Konrad-Adenauer-Stiftung, Friedrich-Ebert-Stiftung, Ruminski, Eckhard. 2012. “Rolle der politischen Stiftungen:Beispiel der Konrad-Adenauer-Stiftung.”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3권 제2호.

Scharenberg, Albert. 2004. “Zustand und Perspektiven der politischen Bildungsarbeit in Ost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7-8.

Schiele, Siegfried 2004. “Ein halbes Jahrhundert staatlich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7-8.

Stiftungen in Deutschland. Berlin.

Widmaier, Benedikt. 2012. “Außerschulische politische Bildung nach 1945 – Eine Erfolgsgeschicht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62. Jahrgang · 46-47.